

시민이 직접 정한 2026년 기후시민회의의 3대 의제 선정

- 시민 주도 ‘상향식’ 의제 확정, 숙의참여단 심층 논의 착수 예정

【국정과제 40】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-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

□ **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**(공동위원장 : 한성숙 국무총리, 이창훈 민간위원장, 이하 ‘기후대응위’)는 7월4일(토) 청주오스코에서 기후시민회의의 전체 회의를 열고 2026년 기후시민회의*에서 논의할 3대 의제를 발표했다.

* 국정과제 ‘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’ 추진을 위해, 지역·성·연령 등을 고려하여 총 200명으로 구성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 되는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

※ 2026 기후시민회의 : 기획참여단(20명), 숙의참여단(180명) 및 외부자문단으로 구성

○ 2026 기후시민회의의 ‘기획참여단’은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제1차 의제워크숍을 통해 ‘숙의참여단’이 논의할 의제에 대해 토론하였으며, 7월 4일 제2차 의제워크숍을 통해 3대 의제를 결정했다.

2026년 기후시민회의의 의제

(의제①)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촉진하는 방안

(의제②)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안

(의제③) 기후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활성화 방안

* 논의의제는 ▲대국민 의제제안 홈페이지 ▲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 현장 제안

▲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취합된 총 690건의 의제를 바탕으로 ‘기획참여단’이 최종결정

○ 또한 ‘기획참여단’은 기후시민회의의 역할 및 의사결정 방법 등 「기후시민회의 운영규정」에 대한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, 시민참여단이 직접 정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기후시민회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.

- 이후 기후시민회의의 ‘숙의참여단’은 총 3개 분과에서 각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숙의과정을 거치게 되며,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의제와 관련된 권고문을 만들어 기후대응위에 제출한다.
- 기후대응위는 기후시민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권고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심의·의결 후 소관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고,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이다.
- 기후대응위 이창훈 위원장은 “기후시민회의가 논의해 나갈 의제를 결정해 준 기획참여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”며, “이번 의제 선정은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의제를 시민 주도로 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상향식 의제 선정이 이루어진 만큼 숙의참여단이 더 밀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후시민소통국 기후시민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임현교 (044-200-1969)
		담당자	사무관 오현진 (044-200-1975)